

남남갈등의 스펙트럼과 논점들:

현실론적 고찰

강 원 식*

I. 서 론

II. 남남갈등의 스펙트럼

III. 남남갈등의 진단

IV. 결 론

Abstract

Spectrum and the Arguments of South-South Conflict: A Realistic Approach

The South-South conflict belongs to a different level from the conservatism-progressivism. The former is concerning in the national security fields, and the latter is in the fields of the outlook on the world and social development. The two must be under consideration separately. To solve the inner conflict in the South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grounds of arguments should be clarified.

Political orientations of the South-South conflict are based on subjective images of good-evil on Kim Jong-il regime, not on the rational judgment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of North Korean society. Some has very idealist views that appeasable warm sunshine will arrange all in good order because the nature of Kim Jong-il and NK society is good, and the others has very realistic views that carrot and stick should be used together, preparing for the worst case because the nature is evil. That is, there is clash between idealistic view and realistic. In idealistic eyes

with a merciful and tolerant heart, the power regime of NK is also good, on the other hand in realistic eyes in the law of the jungle that the strong prey upon the weak, Kim Jong-il regime is also the axis of evil. There is no doubt that Kim Jong-il regime could reform the policies and system and participate the world community, at the same tim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NK regime could go on exploit the people.

However national policy must be on the lines of realistic views, because it should be to avoid the worst case, not to pursue the best. In this monograph the disputed points of conflict, such as approach methods, views on the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f NK, 'national collaboration', and sunshine policy, is reviewed from the essential viewpoints of universality and actuality. South-South conflict in Korean society could come to the mutual consensus, and ravel out.

Key Words: South-South conflict, pro-North Korea, anti-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military-first politics, national collaboration, sunshine policy, realism and idealism

*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

I. 서 론

남남갈등이란 말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취하고 마침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와 한국의 대외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보편적 현상으로 회자되었는데, 남남갈등은 북한이 핵위기 외중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현재 남남갈등은 대북관을 둘러싼 갈등, 노사갈등, 세대 간 갈등, 한·미관계에 대한 갈등, 경제정책에 대한 갈등,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등 하나의 축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복잡한 문제구조와 함께 얹혀 있다. 남남갈등이 보혁갈등과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남남갈등이 보혁갈등에 투영되고, 보혁갈등이 남남갈등에 투영되고 있다. 보혁갈등이 남남갈등을 끌어들이는지 남남갈등이 보혁갈등을 포섭하였는지, 또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쟁점의 갈등을 획일적으로 이분화하여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려우나, 그 중첩현상을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근대 사회와 함께 시작된 문제로서 세계사적·철학적 성찰의 대상이지만, 남남갈등의 문제는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생겨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립, 그리고 망국으로 이끌기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와 개혁의 문제가 남남갈등과 중첩되어 있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 데에도 또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남갈등은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 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남남갈등에 중첩되어 있는 다양한 보혁의 이미지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남남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통일안보 문제영역에 국한시켜 논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온 좌우익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남남갈등 문제로 지칭된 최근 몇 년간에 한정한다.

II. 남남갈등의 스펙트럼

남남갈등은 본질적으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각 개인·집단간의 입장 차이를 말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세판단에 기초한다. 즉 북한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기초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정책정향을 결정한 것이다.

먼저 ①북한에 대한 인식이란 북한의 체제, 문화, 주민 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는 과거의 북한에 대해 각자가 형성해 온 이미지이며, ②북한의 현재 상황이란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현황 또는 변화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의 문제이고, ③북한에 대한 전망이란 북한의 대내외상황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를 종합한 바탕으로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정도 여부에 대한 예측이다. 예컨대 개혁·개방정책, 핵무기 개발·보유, 미국의 대북정책,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이 결국 붕괴될 것이라든지 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든지 또는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든지 등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또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전망하는 것이다. ④이러한 대북관을 바탕으로 각자의 대북 정책정향이 결정되는데, 이는 대북지원의 상호주의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및 주적개념 등 안보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4가지 항목의 논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의 스펙트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대북 인식을 ‘선량/사악’으로, 대북 현황 판단을 ‘변화/불변’으로, 대북 전망을 ‘안정/불안정’으로, 대북 정책정향을 ‘온건/강경’으로 나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인 「대북 인식」이란 북한의 권력핵심 특히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다. 대북 인식이라 할 때, 그것이 김정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과 체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지칭하여야 할 것이나, 북한 주민이 우리의 동포임에 틀림없는 한, 대북 인식을 규정하고 있는 본질은 북한 체제의 문제이며, 또한 그 핵심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김정일에 대한 인식을 논점으로 삼되, 김정일의 본성이 ‘선량/사악’하다거나, 또는 김정일은 ‘대화 가능/불가능’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런 판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김정일을 ‘지지/반대·비판’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를 대별하여 ‘선량/사악’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항목인 「대북 현황 판단」에서 ‘변화’란 북한이 대내적으로 개혁정책을 추

진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남 적화전략도 포기하고 세계사회에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불변’이란 북한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인 「대북 전망」에서 ‘안정’이란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거나, 또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체제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응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정’이란 대내적으로 경제회생과 사회통제에 실패하여 탈북자가 급증하고 민심이 흉흉해져 민중봉기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체제유지 수단으로 핵무기 등 군사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결과로 체제가 고립되거나 국제사회에 의해 응징된다는 판단이다.

네 번째 항목인 「대북 정책방향」에서 ‘온건’이란 ‘탄력적 상호주의’에 입각하거나 또는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을 문제삼고 미국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경’이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재고·중지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하며, 북핵문제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공갈을 중단하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동시에 모든 핵시설 및 무기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강경’이라 하여도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 압박하되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상과 같이 남남갈등의 스펙트럼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 변수를 4가지로 나눌 때, 이를 조합하면, 모두 16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16개의 경우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북한에 대한 과거 이미지에 기초하여 북한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각자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대북 인식 → 대북 현황 판단 → 대북 전망 → 대북 정책방향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이미지인 「대북 인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이어야 할 「대북 현황 판단 → 대북 전망 → 대북 정책방향 결정」이 매우 주관적이면서 자기합리화된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가지의 경우를 모두 나열하여 분석하기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눈다. 즉 후자를 「인식-정책」의 차원으로, 전자를 「현상-정책」의 차원으로 구분할 경우, 「인식-정책」의 차원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선입관이 스스로의 정책정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다분히 감성적·비합리적 이미지

를 살피고, 「현상-정책」의 차원에서는 「대북인식 → 대북 현황 판단 → 대북 전망 → 대북 정책방향 결정」이라는 다분히 이성적·합리적 이미지를 분석한다.

먼저 「인식-정책」의 차원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선량/사악' 인식과 정책방향의 '온건/강경'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 ①선량-온건, ②선량-강경, ③사악-온건, ④사악-강경 등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선량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경우는 비논리적이므로, ②를 제외한 3가지의 경우만이 존재할 수 있다.

①선량-온건: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핵심은 본질적으로 선량하므로 지금까지 대내외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살적 환경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을 우호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는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많은 잘못과 실책을 범해왔지만, 이를 용서하고 도와주면 마침내 개과천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③사악-온건: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핵심은 본질적으로 사악하며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강경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온건하게 대해야 한다거나, 또는 고장난 비행기의 추락 가능성을 우려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연착륙(soft landing)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의 관점에서는 '평화적 이행' 전략이다.

④사악-강경: 사악한 김정일을 강력 응징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질곡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현상-정책」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 태도를 살펴본다. 먼저 이성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대북 현황 판단 → 대북 전망 → 대북 정책방향 결정」의 3가지 축을 기초로 우리 사회에서 대북 정책방향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①변화-안정-온건, ②변화-안정-강경, ③변화-불안정-온건, ④변화-불안정-강경, ⑤불변-안정-온건, ⑥불변-안정-강경, ⑦불변-불안정-온건, ⑧불변-불안정-강경 등 8가지의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각 경우에서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낸 「대북 인식」을 동시에 추론할 수 있다.

①변화-안정-온건: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고 그 성공 가능성도 있어 북한이 온건화될 것이므로 대북정책도 온건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화해협력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선량'하다고 본다면 당연한 입장이고, 만일 김정일 정권은 사악하지만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김정일의 선량한 마음을 믿는 우호적 입장이다. 적극적 화해협력정책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②변화-안정-강경: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고 체제안정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남한의 국익과 통일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강경대응하여 북한을 압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김정일은 사악하다는 인식에 기초하며, 극단적인 반복론이다.

③변화-불안정-온건: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지만 체제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면하여 위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점진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건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로 김정일 정권이 선량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일종의 점진적 통일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①의 입장보다는 조금 우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화해협력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④변화-불안정-강경: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지만 체제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불안정이 한반도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전에 강경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사악하다는 인식에 기초하는데, 체제 안정에 실패하면 이를 물리적으로 돌파하려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쟁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체제붕괴 유도론이다.

⑤불변-안정-온건: 북한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체제관리·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안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온건하게 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정일을 사악하게 보는 경우와 선량하게 보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악하다면 이는 핵을 보유한 김정일을 두려워하는 경우이고, 김정일의 선량함을 믿거나 지지한다면 당연히 이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약자의 논리이다.

⑥불변-안정-강경: 북한이 현재 주민 생활의 안정보다는 사상통제와 핵보유를 통한 체제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강경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김정일이 사악하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본다. 더욱이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집단과 연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현재 미국의 입장이다.

⑦불변-불안정-온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기만전술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온건정책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김정일 정권의 '선량/사악'에 대한 판단보다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이며, 북한정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극단적 찬북론(贊北論)이다. 또는 김정일 정권이 사악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과거 미국의 연착륙정책에 해당한다.

⑧불변-불안정-강경: 북한은 현재 거짓말만 하고 있어 향후 체제도 결국 망할 것이라는 판단위에 강경대응을 주장한다. 당연히 김정일 정권은 사악하며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합리적 반북론(反北論)이다.

이상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남남갈등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온건/강경’의 결과적 행동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나타나게 되는데, 대북 온건적 정책 정향을 가진 ①③⑤⑦과 대북 강경적 정책정향을 가진 ②④⑥⑧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북 인식, 즉 김정일 정권에 대한 ‘선량/사악’의 판단 기준에 의해 내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선량’하다는 관점에 입각한 ①③과 ‘사악’하다는 관점에 입각한 ②④⑥⑧로 나뉘어 지고, 그 중에서 ⑤⑦의 경우는 양측에 모두 속한다.

<표 1> 남남갈등의 스펙트럼

대북 인식	대북 정책정향	대북 판단·전망·정향	입장	분류
선량	온건	⑦불변-불안정-온건	극단적 찬북론	이상론
		①변화-안정-온건	적극적 화해협력정책	
		③변화-불안정-온건	소극적 화해협력정책	
사악	온건	⑤불변-안정-온건	적극적 약자 ¹⁾	현실론
		⑤'불변-안정-온건	소극적 약자 ¹⁾	
	강경	⑦'불변-불안정-온건	연착륙정책 ²⁾	
		④변화-불안정-강경	체제붕괴 유도론	
		⑥불변-안정-강경	미국의 입장 ³⁾	
		⑧불변-불안정-강경	합리적 반북론	
		②변화-안정-강경	극단적 반북론	

¹⁾ ⑤는 북한 정권이 선량하든 사악하든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므로 이상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약자의 논리인데, 상대가 선량하다고 판단하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사악하다고 보면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²⁾ 클린턴 당시의 연착륙정책은 북한의 고장난 비행기로 전제하였기에 스스로 채찍 사용을 포기하였지만, 그러한 전제위에서는 현실론적 정책이었다.

³⁾ 이는 미국내 대북 강경론이지만, 대북 온건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사악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보유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한다. 다만 문제 해결 수단에서 온건론이 보다 당근을, 강경론이 보다 채찍을 강조하는 차이에 불과하다. 온건론도 협상이 실패하면 강력 응징한다는 점에서 결국 ⑥의 입장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⑦선량-불변-불안정-온건」은 극단적 찬북론이

며, 「②변화-안정-강경」은 극단적 반복론이라 할 수 있으며, 「①변화-안정-온건」과 「⑧불변-불안정-강경」은 온건적 정향과 강경적 정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상황 판단에 기초한 정책선택이며, 따라서 그러한 정책정향이 신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④⑤⑥은 광범위한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③변화-불안정-온건」과 「④변화-불안정-강경」은 현재의 남북관계 변화 및 북한에 대해 비교적 낭만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주관적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온건론에 가깝다. 「⑤불변-안정-온건」과 「⑥불변-안정-강경」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체제통제·핵개발 등을 통해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라는 전제위에,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강력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건하게 대하자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를 종합하면, 남남갈등의 정책스펙트럼은 ⑦>①>③>⑤>⑤'-⑦'<④<⑥<⑧<②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남남갈등의 당사자를 어떻게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파(좌익)/우파(우익, 또는 '보수/진보'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보수/진보'의 구분에 대해서는 논자가 서론에서 이것이 남남갈등의 논점을 오히려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적확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좌/우'의 구분은 이념적 성향을 반영한 것인데, '좌/우'를 구분하는 근대사회의 전통적 관점을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좌/우'의 구분을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찬반, 친소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 규정한다면, 이는 논자가 앞에서 설정한 '선량/사악'의 기준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⑤와 ⑦의 경우에는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밖의 경우도 모두 완전하게 '선량/사악'의 어느 한쪽에만 서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구분이 논리화를 위한 이념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남남갈등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개념은 내면화되어 있는 인식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양상을 기준으로 지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네 가지 항목 가운데 「대북 정책정향」을 중심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온건/강경'으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 배경이 상이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논자는 이를 이상론과 현실론이라 지칭하고 싶다.

즉 앞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이상론이란 북한에 대한 나름의 인식과 판단기준에 따라 남북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발전방향을 이상주의적으로 지향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론이란 이상주의를 실현 불가능한 몽상 또는 환상으로 보고 남북관계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현상과 미래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에는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선량/사악’ 인식이 주로 작용한다. 즉 「인식-정책」 차원의 감성적·비합리적 이미지가 「현상-정책」 분석의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대북 현황 판단」, 「대북 전망」에 대한 이성적·합리적 이미지 형성을 방해하여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며, 더욱이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대북 인식」 이미지는 감추어지며, 스스로 자신의 「현상-정책」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내면화 구조를 갖게 된다.

둘째, 남남갈등은 이상론과 현실론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인식-정책」 및 「현상-정책」 차원을 종합하면, 이상론은 북한 정권이 선량하므로 온건하게 대응하면 마침내 남북관계도 통일문제도 모두 좋아질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판단에 입각하고 있으며, 현실론은 북한 정권이 사악하므로 언제 우리를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초한다.

Ⅲ. 남남갈등의 진단

남남갈등은 대체로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선량/사악’, ‘대화가능/불가능’, ‘지지/불지지’ 등의 인식에 기초하므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북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하였듯이, 이에 대한 선입견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 판단까지도 좌우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밝혀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 문제에서 유발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선입견을 깨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대북 현실론이 잘못이었음을 단박에 깨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개혁·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남한 주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핵무기도 완전 폐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상론이 잘못이었음을 단박에 깨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남한에 대해 군사 도발하기를 상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본 모습을 바로 밝히는 노력이 선행되어 「대북 인식」 이미지를 바로 세우고, 또한 「대북 현황 판단」, 「대북 전망」의 문제에서도 현상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의 분석 기준과 핵심적인 세부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분석의 기본 관점

남남갈등은 북한의 정권과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이 당면한 현실 및 향후의 모습에 대한 판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르게 분석·진단하기 위한 기준점은 보편성과 현실성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보편성의 관점이다. 특정사회 내부의 갈등은 당해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진단함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진단의 기본 관점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보편적 기준이어야 한다. 역사적이라 함은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실험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나를 보는 것이며, 세계적이라 함은 우리 사회의 눈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눈을 의미한다. 우물안 개구리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정보통신혁명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21세기 세계환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남남갈등의 문제를 관찰하는 경우, 이 보편성의 기준이란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 정책이 역사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오늘날 세계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처럼 종적으로 횡적으로 열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정면에서 천착할 때에만 바른 진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역사적·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자기 주관에만 빠져 보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둘째, 현실의 관점이다. 사람들은 선악정사(善惡正邪)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악이란 ‘좋은/나쁜’으로서 그 결과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며,¹⁾ 정사란 ‘옳음/그름’으로서 그 동기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

악은 다분히 존재(sein)에 대한 가치판단이며, 정사는 당위(sollen)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선악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정사는 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견비하고, 존재와 당위를 고루 살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선악정사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당면하여 그것이 유리하다거나 또는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못이었음을 예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현실적 선악의 문제보다 당위적 정사의 문제를 더욱 중시하거나, 또는 현실의 손익문제만을 뒤쫓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 태도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당위의 영역을 중시하든 존재의 영역을 중시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경우, 그것이 전체 국민에게 얼마만큼 유용한가 하는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정사를 판단하지만, 특히 국가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역사적·상황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 초래할 피해는 심각하다. 개인의 삶이라면 선악정사에 대한 잘못된 오판이 초래할 책임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며, 철학적 소신에 따라 현실의 삶을 내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와 개인에게 주는 엄청난 결과를 감안할 때,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당위의 영역보다는 존재의 영역, 정사보다는 선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당위를 전적으로 도외시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정사의 기준에 따라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의 정치철학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되, 정치현실을 선악의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당위의 영역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도 되지만, 국민들이 살고 있는 존재의 영역은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국가의 정책은 현실 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미래의 구현을 위해 현실 사회를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남남갈등의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남남갈등이 개인의 대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판단과 입장이라는 점에서 개인 선택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¹ 선악정사에서 말하는 ‘선악’ 개념은 이 논문에서 앞서 언급한 ‘선량/사악’ 개념과는 다르다. 여기에서의 ‘선악’은 好不好이며 利不利이다.

한다는 당위의 영역을 앞세워 현실상황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북·통일정책은 구체적인 현실문제이고, 그 때 고려하는 당위의 영역이라는 것도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현실의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민본주의적 군주제라든가 20세기 현실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향 등, 즉 당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남갈등의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당위의 영역 보다 현실의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 세부 논점들

남남갈등을 진단하는 세부논점은 「대북 인식」, 「대북 현황 판단」, 「대북 전망」, 「대북 정책방향」이라는 위에서 설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논점을 분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인식 또는 접근방법의 문제로서 “1) 북한을 보는 내재적 접근법은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우적개념 또는 민족관념을 검토한다. 둘째, 대북 현황 판단 및 전망과 관련하여, “2) 북한은 변화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대북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3) 민족공조는 타당한가”와 “4) 햇볕정책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 당국의 민족공조 주장과 남한 당국의 햇볕정책이 맞물리면서 남남갈등이 첨예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1) 북한을 보는 내재적 접근법은 타당한가

송두율 교수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했다.² 원래 내재적 접근은 사회주의 국가 연구를 위해 유럽학계에서 시작된 연구방법론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안’으로부터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척도에서 분석하는 외재적 접근은 일방적인 것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한 내재적 접근은 1970년대 서독의 사회학자 루츠(P. C. Ludz)에 의해 강조되었고, 그 후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서독의 동독 연구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²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발전하였다.

통일 후 동독측 비밀문서 공개과정에서 루츠 교수가 동독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적성이 문제되었으나, 루츠파의 동독에 대한 내재적 연구는 동독 사회를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고 인터뷰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등 통일 후 동독주민의 사고 및 행위패턴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나마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과는 달리 여론조사, 현장조사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은 북한 정권이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설정한 체제논리에만 입각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우리 대학가에 열풍처럼 번졌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은 바로 그 내재적 접근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내재적 접근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있게는 하였으나, 그 이해가 본질적으로 북한의 수령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출발점으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체제 지배층의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내재적 접근에 따라 북한 체제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내재적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닫힌 사회’이지만, 내재적으로 이해하면 ‘정당한 사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 내재적 접근은 체제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활로를 열어준 이론이었으며, 따라서 북한이 송 교수를 주석단의 일원으로 환영하고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보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내재적 접근에서 출발한 우리 사회의 북한연구가 스톡홀름 신드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신드롬은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인질강도 사건 당시 인질로 잡힌 여성들이 인질범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된 데서 유래된 것인데,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북한 이해는 인질범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인질들의 심리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인질극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인질들의 심리상태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스스로의 방어기제로서 인질범에게 협력적으로 행동하면 인질범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질범의 호의를 획득하려 하며, 동시에 구조자인 경찰의 선부름 구출시도가 자신들의 상황을 죽음으로 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후 인질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질들은 인질범

의 인간적인 면에 끌리게 되고, 또한 인질범이 직면한 문제상황도 동정하게 된다. 얼마나 힘들고 상황이 급박했으면 인질극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선량한 마음의 발로에서이다. 이리하여 인질들은 마침내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어 약자의 편에서 강자의 해결법에 함께 반발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조하려는 경찰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고 대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톡홀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 것이나, 특히 정치적·이념적 대립상황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한 ‘북한 바로알기’는 마치 인질이 인질범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듯이, 분단 지속상황에서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심정적 동조로 이어졌다. 수령체제와 주체사상이라는 ‘안’의 시각과 논리로서 문제상황을 바라보면서 북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일방적 이해로 이어졌고, 북한의 문제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특수성을 제대로 모르는 비전문가의 소치로 비난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체제와 수령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실정으로 북한의 내부상황이 점차 어려워져도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는 민족적 연민과 결합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은 우리 사회 내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이성’에서 출발한 우리의 대북관은 어느새 민족이라는 ‘감성’에 편승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95~98년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굶어죽어도, 북한 정권이 그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억 달러를 들여 김일성의 주검을 안치하기 위한 금수산기념궁전을 호화롭게 건립하여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우리 사회는 이를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자연재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경제봉쇄를 강화하여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내재적 접근과 이로 인한 잘못된 대북관이 우리 사회의 대북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져왔고, 그것이 앞에서 논설한 대북 인식의 ‘선량’, ‘대화가능’, ‘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남남갈등을 유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국내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종석 박사는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안’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현상이든 일단 ‘안’으로부터 이해한 뒤에 그 검토는 ‘안’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바깥’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³ 또한 강정구 교수는 북한을 내적 논리로 설명하여야 하지만, 그것만

으로는 객관적 설명이나 비판이 어려운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논설하였다.⁴ 그러나 아무리 비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여도 이미 ‘안’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내재적 접근이든, 또는 먼저 ‘안’을 이해한 뒤에 ‘바깥’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든 간에 문제와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질범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는 오늘날 인류보편의 세계사적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잘못된 체제이다. 또한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든 인질극을 벌인 인질범의 처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지양하고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질극의 재발을 막는 건강한 사회의 해법은 이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우선 ‘바깥’의 보편적 기준으로 문제의 핵심을 분석·처리하고, 그 연후에 ‘안’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인질극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질범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재적 접근을 통하여 정상 참작하고,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안’의 관점에서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앞뒤가 전도된 잘못된 연구방법론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국제적 기준에서 북한을 보아야 하며, 또한 내재적 관점이라 해도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보편적 기준에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재적 기준에서 이해하는 ‘보편적·내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국가로서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다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인류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한편 대북 인식의 문제에서 반드시 거론하여야 할 논점의 하나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 또는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⁵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며 동포인 동시에, 북한은 통일의 대상으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통해 상쟁관계에 있기도 하다.

³ 이종석,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1990년 가을).

⁴ 강정구, “우리의 반쪽인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⁵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문제 또는 민족관념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3) 민족공조는 타당인가”를 논하면서 상술할 것이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이울배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 또는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원기둥을 위아래에서 보면 원이요, 옆에서 보면 사각형인 것과 같다.

북한 정권이 대남적화 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은 명백한 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관리 또는 분단관리의 차원에서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는 적이며, 대북 경협사업자에게는 파트너일 수 있는 것이다.

우적개념, 민족관념에 혼란을 겪고 있는 까닭도 본질적으로 대북 스톡홀름 신드롬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동포로서 북한을 바라보면서도 북한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대북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나야만 하고, 그럴 때에만 올바른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2) 북한은 변화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의미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채택·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개선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남 적화전략도 포기하고 세계 사회에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현실사회주의의 한계를 자인하고 중국식이든 북한식이든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결국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대표되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특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정책이 그러한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 20세기에 존재한 전세계의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는 변화하였다. 이것이 역사적 보편성이며, 따라서 북한도 변화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하여도,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북한체제의 정체성을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부정되면 북한 정권의 존립근거는 당연히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정체성을 쉽게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냉전체제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제 실패한

현실사회주의를 버리고 새롭게 재출발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면죄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는 이를 끝까지 거부한 정권은 민중봉기 등에 의해 축출되었다. 이리하여 현실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되었으며,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내전을 통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중국도 베트남도 라오스도 사회주의를 부정하면 피를 부른 사회주의혁명 자체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 및 국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쿠바의 경우에도 혁명의 당사자인 카스트로가 생존하여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아직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공식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질적 정책내용,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사회주의를 폐기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단지 공산당 강령과 슬로건으로만 남았으며, 다만 이를 비판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만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를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변화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현실사회주의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향후 중국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방식의 변화조차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북한도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처럼 사회주의를 비공식적이거나 부정하고 자본주의방식을 채용하고 싶어도, 이는 중국적으로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에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 베트남, 쿠바 등과 달리 북한은 분단국가로서, 남한이라는 체제경쟁세력 또는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를 개혁할 만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해방 후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한 대한민국과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왜 분단국가를 수립하고 한국전쟁까지 도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느냐는 자기모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체제 변질과 정권기반의 동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도 신의주특구도 진정한 변화를 향한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북한 정권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용’을⁶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백하다.

한편 남북대화 또는 대외관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간부들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체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 대남사업 또는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가장 체제수호적인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며, 그 때문에 대외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개혁적 언행을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북한 체제는 안정화될 수 있는가? 대내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상태, 또는 나아가 우호적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사회주의이념, 체제, 국제정세 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정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국제환경도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결사항전의 반미투쟁과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확대된 오늘날 사회통제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경우 보상을 통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서 단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외부접촉이 확대되면서 사회통제 기제가 더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 필수품 사상통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미·일 등의 지원을 받아도 체제가 위협해지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게다가 이미 논급하였듯이 사회주의이념이 갖는 태생적 모순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도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 핵위기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가능성, 중국의 정권교체 시도 가능성 등이⁷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결국 북한은 경제난의 지속, 외부물질·정보의 유입 증가, 세대구성 변화 등으로 기존의 사회통제 기제가 마비되고 더 이상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통치가 불

⁶ 김정일 담화(1993.3.1),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울될수 없다,” 『로동신문』, 1993년 3월 4일.

⁷ 강원식,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동북아정세 전망,” 『中蘇研究』 (한양대), 제28권 제3호 (2004 가을); 강원식, “6자회담의 동상이몽 성격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4년 여름) 참조.

가능하게 되면서,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지배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이 권력말기 또는 체제말기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뜻하며, 군대를 앞세운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사상론, 강성대국론은 바로 이와 같은 체제말기현상을 변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이미 위에서 북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향후의 전망도 불안정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동의를 아닌 강제에만 의존하는 정치권력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다.

3) 민족공조는 타당한가

7·4 공동성명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 3원칙으로 규정한 이래로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여 왔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남남갈등이 문제시되면서 북한이 ‘민족공조’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민족공조’란 용어와 그 함의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면서 남남갈등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즉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공조를 거론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외세 공조가 아닌 동족과의 공조”를 강조하여 왔다. 그러다가 북한은 『로동신문』의 2001년 1월 4일 논설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에서 ‘민족공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1월 10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의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도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민족공조’가 『로동신문』 논설의 표제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로동신문』 2001년 2월 19일 논설 “민족공조로 통일문제해결”이었으며, 그후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성명과 호소문의 이름으로 ‘민족공조’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⁸ 『로동신문』은 논설 “민족단합은 애국, 외세의 존은 매국”(2001.5.15)에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애국과 매국’으로 이분화하고 스스로를 ‘선’으로 포장함으로써 남한의 국론분열을 적극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전·선동의 결과로 ‘민족공조’는 마침내 2001년 4월 서울에서 한총련의 ‘30일 반미구국단식단 투쟁’의 선동구호로 되었으며,⁹ 2001년 7

⁸ 『조선중앙통신』, 2001년 4월 26일, 6월 8일, 6월 25일, 8월 8일.

⁹ 슬로건의 내용은 “외세공조 파기하고 민족공조 구축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이었

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농민통일대회」에서는 남한측 참석인사가 민족공조를 강조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⁰

먼저 첫째, 민족공조라고 할 때, 누가 누구와 공조한다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한간의 민간공조인지, 정권공조인지, 모든 민족구성원의 공조인지 등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별할 것인지 동일시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¹¹

민족공조라 하면, 당연히 민족끼리의 단합과 협력이며, 이는 남북한의 정부와 민간을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한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북한 주민이 오늘날 국제관계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즉 대남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남한의 정부 또는 주민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민족공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명백히 그러하지 못하다. 청소년, 사회단체, 학술, 스포츠 등 각종 남북한의 비당국간 대화의 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측 대표들을 민간대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공조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용어이다. 물론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이 민족공조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이해를 완전하게 대표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나,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족공조는 명백히 북한이 주장해 온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그 개념과 논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남남갈등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민족공조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은 결국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동일시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공조의 관점은 북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북한 동포를 능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하여 민족공조에 동조한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주민을 억압하고 반민족적 정책을 추진하여도 침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

다. “30일반미구국단식단 투쟁 힘차게 전개,” 『조선중앙통신』, 2001년 5월 16일.

¹⁰ “북남농민통일대회 금강산에서 개막,” 『조선중앙통신』, 2001년 7월 18일.

¹¹ 북한에서 민족 개념은 원래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 등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스탈린의 고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민족 개념도 사라진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언어와 핏줄이 가장 중요한 민족의 기본 징표라면서, 민족이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의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고 강변하였다. 김정일 논문(1991.5.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이 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많은 탈북자, 장마당의 꽃제비, 그리고 강제수용소의 참상 등으로 표징되듯이, 김정일 정권은 국민을 굶기고 억압하고 인권을 말살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비도덕적인 독재정권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이 동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며, 민족공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이 말하는 민족공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민족공조는 마땅히 북한 주민과의 공조이어야 하며, 이는 북한 당국의 반민족적 범죄에 대한 고발과 저항이어야 한다.

둘째, 민족공조라고 할 때, 왜 공조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조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항하여 힘을 합친다는 개념인데, 무엇에 대항하자는 것인지를 문제이다. 북한은 명백히 외세에 저항한 민족공조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 밖의 세계가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우리 민족을 압살하려 하는가? 또는 북한이 미국의 압살정책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우리 민족을 압살하려 하는가?

세계가 민족간의 대결일 수 없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설령 어떤 국가가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북한 주민 또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압살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북한 주민의 고통은 미국과 세계가 북한을 압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모순과 북한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이며,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권력을 세습하고 독점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다.

셋째, 무엇을 위해 공조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공조가 필요한가? 북한의 핵무기가 통일후에는 우리의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구실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양보하여 물질적 보상을 담당할 주체가 바로 남한의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상대방과 공조한다는 개념은 전대미문의 년센스이다.

그렇다면 민족공조를 통해 경제실리라도 얻을 수 있는가? 혹자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지지부진한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취약한 경제력과 여건을 생각할 때,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족동질

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한편 국제환경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이 부정적·소극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적극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이 설령 부정적이라 하여도, 민족공조를 통해 배타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주변국의 오해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국제적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민족공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조용히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또는 전세계 패권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반미=민족공조’, ‘친미=국제공조’라는 이분법으로 연계되어 미국과의 기존관계를 악으로 치부하고 친미 사대주의로 공격할 수 있는 감성적 측면이 개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①맑스주의적 관점처럼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의 국익을 수탈하여 왔거나, ②앞으로 우리 민족을 압살하려 하거나, ③미국의 세계전략이 한국의 현실적 국익에 배치되는 경우를 전제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보여온 팔목상대한 국력신장에 비추어 ①의 논리적 근거는 전무하며, ②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이 한민족을 압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정책이라 하여도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그것을 북한 주민에 대한 압살책이라 할 수 없다. ③의 경우에도 한·미간의 경제·사회적 긴밀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우리의 국익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다.

또한 미·중대립을 전제할 때 민족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족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과거 중·소대립 시기 북한의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남북한이 미·중대립 구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에 편향되고 남한이 미국에 편향되기 보다는 남북한이 공조하여 미·중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먼저 이 논리는 ①미·중대립이 기정사실이며, ②북한의 이해관계가 우리와 동일하거나 우리 외교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③미·중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 출발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이다. ①은 대립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②는 불가능하며, ③은 민족공조라고 해도 미·중이 이에 좌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민족공조의 남북한이 결코 미·중대립의 균형추로 될 수는 없다. 이는 자기중심적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김용순 대남담당비서는 남북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우리 민족끼리 힘

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라는 글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남북관계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변’을 만들어내었다고 강조하였다. 즉 ①남한 주민들의 반복 대결의식 해소 및 김정일에 대한 숭배열풍, ②대화와 협력, 내왕과 통일운동의 활발한 전개, ③남한에서의 반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 전개 등인데,¹² 이는 김용순이 대남담당으로 것처럼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 내었음을 자랑하는 것인 동시에, 민족공조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도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사실을 실증한 것이었다.

결국 민족공조는 그 용어와 개념이 적절하지도, 추구하는 목적과 얻어지는 결과가 합당하지도 않다.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남북한과 전세계의 모든 한민족이 공조한다고 하여도 그 공조가 외세를 배격하는 배타적 공조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공조는 북한 정권의 주민 억압에 반대하는 공조이어야 하고, 세계와 함께 화합하면서 민족의 번영을 모색해 나가는 보편성에 입각한 상생적 공조이어야 한다.

4) 햇볕정책은 바람직한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발되어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의 대북정책도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쬌여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긴다는 것인데, 외투를 벗긴다는 점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북 포용정책 또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었지만,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로서 널리 불리워졌다.

2003년 2월 통일부가 햇볕정책을 총괄하면서 발간한 자료집에 의하면, 햇볕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 원칙으로 내걸고, ①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⑤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등을 정책기조로 삼았는데, ①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다양한 남북대화 추

¹² 김용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03년 6월 13일.

진, ②군사적 긴장 완화, ③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④인적·물적 교류 증대, ⑤이산가족 문제 해결, ⑥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⑦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⑧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의 다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¹³

사실 햇볕정책의 추진 결과로 남북관계는 전례 없는 교류·협력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되는 평가가 가능하며, 그것이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햇볕정책은 처음부터 목표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솝우화는 바람이 없이도 햇볕만으로 외투를 벗길 수 있었으나, 현실정치에서 사탕과 채찍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서운 바람이라는 기본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 햇볕정책은 결코 소기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햇볕의 영역만 진전되고 바람의 영역은 담보하거나 오히려 후퇴하여, ①협력만이 강조되어 안보는 뒷전이 되고, ②평화교류는 실현되나 평화공존은 무시되고, ③화해·협력은 강조되었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고, ④북한의 이익과 입장이 남한보다 우선시되고, ⑤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은 무시되고 민족공조만이 강조되고, ⑥국민적 합의는 깨어지고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햇볕정책이 처음부터 목표를 실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를 포기한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북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결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선량' 이미지가 생겼고, 끊임없이 햇볕을 방사하기만 하면 결국 '선량'한 북한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순진한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햇볕만 얻고 끝까지 옷을 벗지 않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햇볕을 방사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 평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둘째, 햇볕정책은 반민족적·비윤리적이라 비판될 수도 있다. 햇볕정책은 사악한 김정일의 개과천선을 한없는 성심으로 기다리는 사랑과 자비의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성선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상주의적이다. 이리하여 그 태도는 고결하고 숭고하여 가없는 찬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종교적 태도이지 국가정책이 취할 바가 아니다. 정치는 현실의 문제이고, 국제관계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햇볕을 퍼붓는 동안에 북한 주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심화되었다면,親북한정권의 햇볕정책은 反북한주민의 정책이 되며, 그렇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반민족적·

¹³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서울: 통일부, 2003), pp. 2-13.

비윤리적이라 비난받을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햇볕정책은 남남갈등을 직접 유발시킨 국론분열정책일 수 있다. 햇볕정책을 찬성하면 탈냉전=평화=개혁=진보=선이요, 이에 반대하면 냉전=전쟁=수구=보수=악으로 등치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남남갈등과 대립의 전선을 형성하여왔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당연히 선을 자처한 쪽이 만들어 낸 것이다. 냉전 수구세력으로 지목된 쪽이 스스로 악이라 단죄하였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순결하고 고상한 이상주의로 포장된 햇볕정책은 반대자들을 쉽게 악으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쉽게 이분법적 용어로 반대자를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불법송금문제 등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강조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햇볕정책이 현대아산의 30년간 금강산경영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단지향적 반통일적 정책일 수도 있으며, 실패한 현실사회주의의 명맥 유지를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역사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형이므로 형의 입장에서 대북관계에서 먼저 양보하고 너그러워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방이 토라지거나 화낼 것이 두려워서 잘못을 보고도 야단조차 치지 못하는 것은 형의 자세가 아니다. 국력의 차이에서 한국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도 이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햇볕론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정권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IV. 결 론

이 논문은 대북·통일·안보 차원의 남남갈등이 세계관·사회발전관을 포함한 보혁갈등의 문제와 중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기에 남남갈등과 보혁갈등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갈등의 원인 또는 논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그러나 II장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남갈등의 정책정향은 북한의 현상과 미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북한 사회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선량/사악’의 주관적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선량’하므로 온건한 햇볕을 쏘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매우 ‘이상론’적인 입장과 ‘사악’하므로 늘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건하더라도 한편으로 강경한 채찍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매우 ‘현실론’적인 입장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남남갈등의 당사자를 현실론자와 이상론자로 지칭하였다.

또한 Ⅲ장에서 보편성과 현실성을 진단의 기본관점으로 설정하고, 내재적 접근법, 북한의 변화·안정화 가능성, 민족공조, 햇볕정책 등 세부 논점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고, 체제가 안정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인식이 가장 논리적인 정세판단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논리적 관점만을 말하자면,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스펙트럼에서 「⑦불변-불안정-온건」의 극단적 찬북론과 「⑧불변-불안정-강경」의 합리적 반북론만이 존립근거가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서 중간 지대가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따라서 스펙트럼상의 중도좌파 또는 중도우파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0가지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질 수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북 인식, 즉 ‘선량/사악’ 이미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⑦의 극단적 찬북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잘못된 ‘선량/사악’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도 마땅히 교정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충분히 현실론적 합일점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하여 남남갈등이 ⑧의 관점으로만 합일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불변’의 「대북 판단」과 ‘안정/불안정」의 「대북 전망」뿐만 아니라 ‘선량/사악’의 「대북 인식」의 문제까지 모두 종합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비와 사랑의 이상론자의 눈으로 보면, 북한의 권력집단도 선량할 수 있으나, 권모술수와 약육강식의 현실론자의 눈으로 보면, 북한의 권력집단은 늘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하였음을 예증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념과 체제, 정책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김정일 정권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권력유지,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단의 기본 관점으로 제시한 보편성과 현실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북한 정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선량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은 후자를 중시하는 현실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와 진보간의 긴장과 갈등은 세계관·역사관의 문제로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그 갈등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회적 불안이 아

나라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남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남남갈등의 이상론자들은 남남갈등이 “적대에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면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말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과거가 ‘적대’라는 악(惡)이며, 미래는 ‘화해협력’이라는 선(善)임을 전제하는 이분법이다. 따라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옳바르며, 이를 거부하는 현실론은 수구적이며 전쟁론이며 악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남남갈등이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그 문구 자체가 갈등을 만든 것이다. 그 어떤 선이라 해도 그 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악으로 지목된 사회의 한 부분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결코 선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며, 오히려 악이다. 또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자들을 폄하하고 악으로 몰아 구축한다면, 그것은 상생의 정책이 아니라 상극의 정책이다. 선이란 그들만의 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이기에, 남남갈등을 통해 실현하려는 그런 이상은 결국 선일 수 없다. 게다가 현실을 떠난 이상은 몽상이며, 환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정관계와 언론계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실, 그리고 거리에서도 남남갈등이 표출되고, 그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유한한 가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내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인간 사회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정치는 바로 그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만일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증폭되고 심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의 잘못이며, 최고 정치지도자의 책임이다.

정치에 대한 가장 고전적 개념 정의는 이스톤(David Easton)의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규정이다.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며, 또한 갈등이 그로 인해 이미 심화되었다면, 아무도 정치의 배분 역할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결국 권위는 추락하게 된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는 확대되고 있는 갈등을 방치하는 정치는 스스로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남갈등이야말로 망국적 위기를 초래할 최대의 요인임을 정치권이 인식하여야 하며, 그 원인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